



가업상속세 감면의 거시경제적 효과



2023. 4. 27(목)

(재)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



순서

1

서론

2

모형

3

정량분석 결과

4

결론

1 서론

1-1

연구배경(1/2)

- 2020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별세에 따라 세계최대규모의 상속세(약 11조원) 발생
- 대기업에 대한 실질 최고상속세율은 60%(기본 상속세율 50%+최대주주 할증 20%)
- 2020년 500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시된 가업승계 실태조사(중소기업중앙회)에 따르면,
94.5%(복수 응답)가 가업승계 시 상속세에 큰 부담을 느낌
- 2020년 터널링 세금을 납부한 기업 중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비율(49.1%) 차지(국세청)

1 서론

1-1

연구배경(2/2)

- 상속세는 중소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(Tsoutsoura, 2015)
- 농우바이오 사례(2013년 기준 매출액 676억원, 종업원 403명)
 - 2013년 상속 이벤트 발생, 소유/경영이 분리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함
 - 1,000억원이 넘는 가업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농협경제지주로 매각
- 이와 같이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가업상속세를 감면해주면,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까?

1 서론

1-2

기존연구와 차별점(1/4)

- ① 첫째, 본 연구는 기업규모분포를 포함해 Grossmann and Strulik(2010) 모형의 과대평가 문제를 완화함
 - ✓ 이 기존문헌은 독일 사례를 활용한 연구로 가업상속세 감면은 능력이 떨어지는 후계자의 가업 상속을 가능하게 해 능력 있는 창업자의 출현을 막기 때문에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함
 - ✓ 그러나 이들은 기업규모를 중소·중견기업, 대기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분석해 가업상속세 감면의 부정적 효과를 과대평가하는 문제를 발생시킴

- ① 첫째, 본 연구는 기업규모분포를 포함해 Grossmann and Strulik(2010) 모형의 과대평가 문제를 완화함
- ✓ 즉, 근로자의 임금과 기업의 영업이익을 비교해 후계자가 근로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기업가가 될 것인지를 선택하는 직업선택의 문제를 대규모기업에도 적용시킴
 - ✓ 근로자의 임금과 소규모기업(예를 들면, 편의점)의 영업이익을 비교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타당하지만, 근로자의 임금과 대규모기업의 영업이익을 비교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비현실적임
 - ✓ 본 연구는 이런 문제를 Lucas(1978)의 통제범위 모형을 활용해 해결함

1 서론

1-2

기존연구와 차별점(3/4)

② 둘째, 본 연구는 가업상속세 인하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다룬 반면, Ellul et al.(2010)과

Tsoutsoura(2015)는 상속세 감면이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

✓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,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(전체기업의 99.9%, 전체고용의 83%를 차지)과

대기업 모두 상속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 가업상속세 인하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할

필요가 있음

③ 셋째, 본 연구는 중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분석한 La(2017)와 다르게 전체기업을

대상으로 분석함

✓ La(2017)는 중규모 이상 기업에서는 근로자와 기업가 사이의 직업선택 문제가 발생하지

않는다고 가정함

✓ 따라서 La(2017)는 가업상속세 감면이 중규모 이상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만을 고려함

✓ 본 연구는 가업상속세 감면이 소규모 기업과 중규모 이상 기업 모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

1 서론

1-3

연구목적

-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규모분포를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나눈 모형을 이용해 한국에서 가업상속세 감면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는 것임
- 한국사례를 활용하는 이유는 한국은 비가족기업보다 가족기업을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
- 가족기업은 한국 전체 기업의 약 74%를 차지함(Choi and Lee, 2017)
- 이런 가족기업은 가업승계를 증시하기 때문에 가업 상속세율에 매우 민감함
- 한국의 직계비속 최고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고(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2022), 20%의 최대주주 할증을 더하면 제일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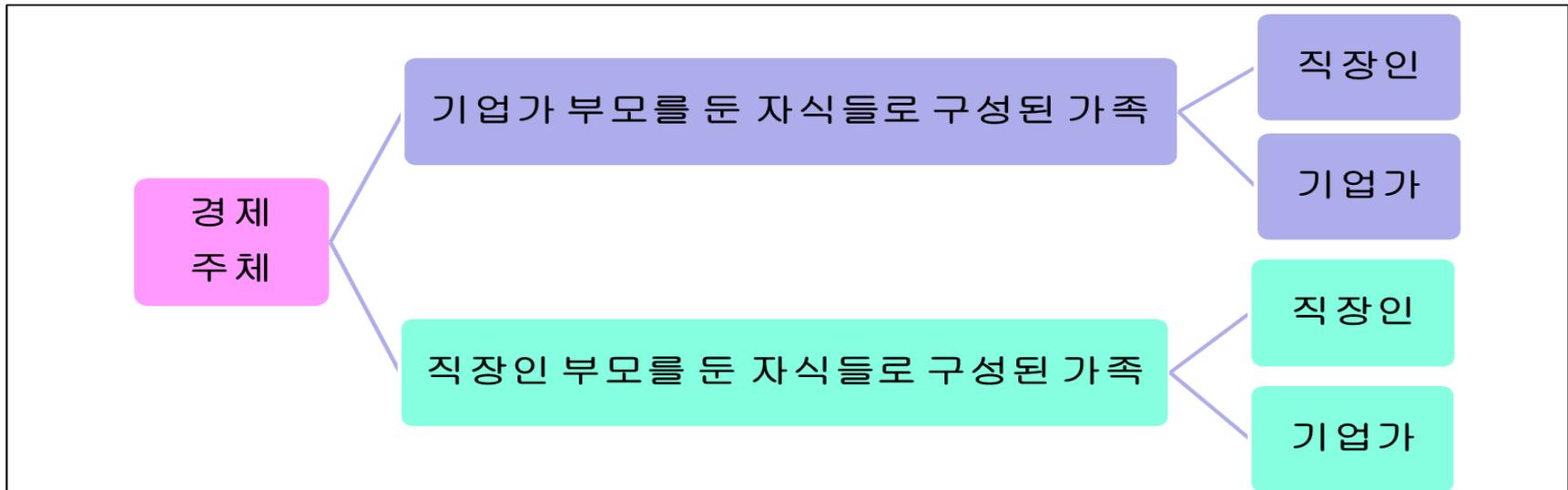
2

모형

2-1 모형 설계

- 연구의 분석모형은 Grossmann and Strulik(2010)의 모형에 기업분포를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(세부내용은 논문 참조)

2-2 모형의 틀



1단계

- 파라미터 값을 입력
- Matlab의 'fsolve' solver 이용 비선형 장기균형 연립방정식 解 도출

2단계

- 변수의 장기균형 값을 초기 값으로 선정
- 'dynare' 프로그래밍 언어에 맞게 비선형 연립방정식 구성

3단계

- 구성된 비선형 연립방정식을 Matlab에서 구동
- 도출된 변수들의 解를 이용하여 결과 분석

2 모형

2-4

모형의 신뢰도

구분	관측치	모형산출 값
기업당 직장인수	15명	15명
창업비용/1인당 GNI	0.146	0.146
총실질투자/실질GDP	0.31	0.40

※ 기존문헌에 따라 선정된 파라미터들(자본에 대한 감가상각률, 유산 파라미터, 노동공급에 대한 Frisch 탄력성의 역수)과 간접적으로 유도한 파라미터들(기업가의 통제범위, 물려받은 자본에 대한 단위판매가격, 창업비용)에 대한 강건성 검정 결과, 본 연구의 기준분석 결과와 일치함

3-1

가업상속세율 50% 감면에 따른 주요 효과

거시변수	변화율(%)
총노동수요(일자리)	0.13
총실질자본	1.93
총실질투자	1.88
총매출액	0.15
총영업이익	0.15
총일반유산	-0.01
사회후생	0.4

- 자본 1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해 자본(기업)을 더 늘림
- 자본량이 증가하면,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노동수요량(일자리)도 증가
- 생산요소인 자본량과 노동수요량이 증가하면, 생산량도 증가
- 생산량이 증가하면, 이에 상응하여 매출과 영업이익도 늘어남
-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량이 증가하면, 임금도 상승
- 가업상속세율을 인하하면, 일반유산보다는 자본을 더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일반유산량 감소
- 결국, 경제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후생도 증가

① 그리스 사례

- ✓ 그리스는 2003년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상속세율을 20%에서 1.2%로 인하함
- ✓ 가용한 그리스 최근 자료 이용 정량분석 실시
- ✓ 가업상속세율을 20%에서 1.2%로 인하하면, 가족기업의 투자가 4.2% 증가함
- ✓ 이 결과는 Tsoutsoura(2015)의 실증분석 결과와 일치함
- ✓ 나머지 결과는 한국의 경우와 일치함

② 독일 사례

- ✓ Grossmann and Strulik(2010) 연구와 같이 물려받은 기업 매각 시 적용되는 상속세율을 9.5%에서 19%로 인상하면서 가업상속세율을 9.5%에서 0%로 인하하는 경우 적용
- ✓ Grossmann and Strulik(2010) 연구에서 활용된 독일 자료 이용 정량분석 실시
- ✓ 물려받은 기업 매각 시 적용되는 상속세율을 9.5%에서 19%로 인상하면서 가업상속세율을 9.5%에서 0%로 인하하면, 실질GDP가 0.73% 증가함
- ✓ 이 결과는 Grossmann and Strulik(2010) 분석 결과와 상반됨
- ✓ 나머지 결과는 한국의 경우와 일치함

4 결론

4-1 연구의의

- 본 연구는 Lucas(1978)의 통제범위 모형을 기반으로 기업규모분포를 고려해 근로자와 기업가 사이의 직업선택을 보다 현실화 하는 이론모형을 제시함

4-2 정책적 시사점 및 한계

-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, 사전 및 사후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짐
- 그리스 처럼 현행 가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음
- 본 연구는 경영능력을 외생화했는데, 내생화된 모형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추후연구로 남겨 둠



경청해주셔서

감사합니다.